

전북도 이차전지 유치의 당위성

항만·공항·철도 등 트라이포트 갖춰

이차전자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일 차전지와 달리 충전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전지다. 친환경 부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니켈-카드뮴, 리튬이온, 니켈-수소 리튬폴리머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 카메라 등 들고 다니는 전자기기뿐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핵심소재이며, 부가가치가 높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2IC 3대 전자부품으로 꼽힌다.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예정지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4.1㎢(427만평)로 되어 있다. 이곳은 향민(25년)과 공항(2028년), 철도(2030년) 등 핵심 물류 SOC 구축이 완료된다.

또한, KIST 전북분원 등 도내 28개 혁신 연구기관, 전북대 등 6개 대학이 인접해 있다.

특화단지 예정자는 최근 3년간 이차전지 기업 총 23개사에서 7조원 투자협약을 맺은 상태다. LG화학·현대모비스·GEM·LG화학·현대모비스 등이 포함돼 있다.

이렇듯 도내 이차전지 기업의 최근 1~2년간 투자금·투자면적은 지난 10년간 투자 금액 대비 3배, 투자면적은 2배로 큰 증가 폭을 보이며, 미래 각광 산업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도의 이차전지 집중 육성 전북도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산업을 특화해 집중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3월 '글로벌 이차전지 혁신 허브' 전북의 새로운 도약 이란 목표로 이차전지산업 육성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면서 전북의 핵심산업으로 이차전지 분야를 대량으로 넘어 세계적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민선8기 전략산업화... 관련기업 집적화, 생태계 빠르게 구축

이차전지 제조부터 폐배터리 등 생애 전주기 안전성 확보

특히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이차전지 산업을 전략산업 중 하나로 삼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알짜 기업들을 유치하고, 도내 대학·연구기관들과 협업해 연구개발(R&D)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태다.

또한 올들어 (주)LG화학·지이엠뉴에너지미터리얼즈 등 이차전지 소재 대기업들이 집적화되면서 전북 새만금이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최적의

공급기지로 입증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전기차를 필두로 한 친환경 경지의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 시장에서 친환경차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에스엔이(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입어 향후 10년간 8배 정도 성장(2020년 461억불→2030

표하며, 전라북도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최적임을 피력하는 등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대해 엄청난 광을 틀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노력과 효과 그리고 과제

전북도는 전기차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이차전지 소재 생산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을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산업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대응하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평가 시, 경제활성화·파급효과와 더불어 관련 기업 현황도 평가하는 만큼 글로벌 최고의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력을 가진 (주)LG화학·지이엠뉴에너지미터리얼즈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이미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입주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지난달 18일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열린 정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심사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발

년 3,517억불)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한국·중국·일본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24%,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54%의 점유율을 보이며,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달 18일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열린 정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심사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발

이에 대해 전북도는 작년 말부터 이미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답팀(TF)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올해 2월에는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위해 도내 대학 등 관련 11개 기관들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차전지 인력양성 지원센터를 개소·운영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 나가고 있다.

전북도는 또 이차전지 소재의 경우, 전북의 강점 산업인 탄소소재와도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도내 전·후방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와 전북대학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테크노파크는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이차전지 생산에서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전주기 안전성도 확보하게 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차전지 기업들의 유치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며,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 하면 '전북'을 떠올릴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집중해 이차전지 혁신 허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순창군의회 정례회 개회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심사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제278회 제1차 정례회를 갖는다.

이번 정례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조례안 2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기타안건 1건 등 총 26건의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일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산지출 승인안과 202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다.

모든 안건은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여 정례회를 마칠 계획이다.

신정이 의장은 개회사에서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난해 해설값마저 폭락하며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공조와 협치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대안을 모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최용수 순창군의원

안전 순창 조성 방안 제언

순창군의회 최용수 경제산업위원장이 1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순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순창군민이 과연 안전한 순창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앞미전 일어난 구립면 투표소 사고·이태원 사고 등을 예로 들면서 "생각지도 못한 안전사고들이 우리 주위에서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안전관리부서와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토록 순창군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시설물 및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가 해제되는 구조물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도로변 사업주진시 안전요원 배치 및 장소 이동시의 교통수단 마련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증 자진납부를 위해 마을택시 이용대상 구역에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운전자도 포함하고, 교통안전 교육의 집합교육을 운영토록 하고,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야간 운동하는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토록 야간스케일리 등 안전운동 흥미와 운동코스에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건의했다.

/정용=김대환 기자

농어촌 맞춤형 의료전달체계 마련 가능해지나

민주 윤준병 의원,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안 등 2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정)이 1일,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사의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체로 의하면 2017년 3,612명이던 공중보건의사는 2023년 4월 기준 3,170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의사의 경우 2023년 기준 복무면제자가 729명인데 반해 신규면제는 450명으로 민료대비 62%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산간僻지의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또한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방 소멸과 인구감소에 따라 기존 설치된 지역의료기관들의 이용 인원 역시 날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농어촌지역에서는 보건진료소가 보건지소와 업무 조정을 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는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

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 간의 통폐합, 보건진료소 간 또는 보건지소 간의 통폐합 등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재편하는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여러 개의 보건 진료소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에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에는 지역의료기관의 범위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건진료소를 주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건의료를 위해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혹여 의사가 배치되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정해진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용=김대환 기자

“금융중심지·새만금 이차전지단지 지정을”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전주 시의회 이기동 의장)가 1일 대통령령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약속 이행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군산시의회에서 열린 제275차 월례회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운석열 대통령의 전북 대표 공약이었으나 대통령령 인수와 국정과제에서 제외됐고,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에서도 논

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는 최근 관련법의 개정 없이 국토부 고시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결정된 것과 너무 다른 쳐사"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치적 승자독식으로 지역 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부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약속 이행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국 5개 지역이 경쟁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업 공모' 이차전지 분야에 대한 새만금 지정도 촉구했다.

시·군의회 의장들은 "단지개발의 신속성과 용지 확장성 국제적 입지를 갖춘 전북 새만금이 특화단지로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군의회 의장들은 "단지개발의 신속성과 용지 확장성 국제적 입지를 갖춘 전북 새만금이 특화단지로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는 1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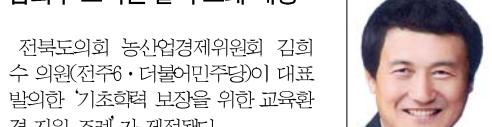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석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비력 높은 등산 인구 증가와 내장산 무료 개방에 대비 한 손님맞이에 박차를 가해라고 역설했고, 이만재 의원은 정읍천 교량 하부 환경개선을 촉구했다.

안건 심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종종 징에 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15건 등을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가결했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2,153억 1,600만원을 승인했다.

/정용=김대환 기자

기초학력 보장 교육환경 지원 균형 마련

김희수 도의원 발의 조례 제정



전북도의회 농산·임업위원회 김희수 의원(전주6·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를 제정해 냈다. 실제 2022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고 OECD에서 전세계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평가 결과에서도 한국의 읽기 영역 평균 점수가 2006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습지원 대상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현황을 파악하는 등 매년 실태를 조사해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김목기 기자